

정세토론회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와 문재인 정부 노동 탄압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일시 : 2019. 08. 31. (금) 19:00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토론 순서

1. 평등노동자회 허영구 대표
 -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 노동자 연대 (1p)
2. 사회변혁노동자당 장혜경 정책위원장
 - 65체제의 균열과 노동자 민중운동의 과제 (7p)
3. 노동자연대 김하영 조직노동자운동팀장
 - 한일 갈등의 본질 : 미·일 제국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모순 (13p)
4. 노동당 이건수 비상대책위원
 - 트럼프 시대, 일본의 고민과 한·일 관계 (18p)
5.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김승만 조직국장
 - 2019년 하반기 계급운동 진영의 공동실천 제안 (30p)

공동주최 : 노동당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평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주관 : 노동당 노동자정치행동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 노동자 연대

허 영 구(평등노동사회, AWC한국위원회 대표)

1. 일본의 경제보복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식민지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5년 2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 법원은 피해자들이 1997년 제기한 소송을 6년이 지난 2003년에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강제징용판결은 연기됐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권과 일본 정부 사이에 맺은 한일위안부 합의(2015.12)를 내용적으로 부정했다.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서 유일하게 한일 정상회의만 개최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까지 내려지면서 아베정권은 2018년 8월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공포를 통해 한국을 백색국가(27개국, 아시아에서 한국이 유일)에서 제외시키는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8월 12일 한국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통해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자발적인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은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여기까지에서 보면 일본군위안부 합의 파기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자본주의 국가간 제국주의 경제전쟁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본주의 세계경제체제는 그 자체 모순에 의해 주기적 경기변동을 일으키며 공황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짝호황을 누렸지만 1970년 초부터 발생한 공황은 주기적 경기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경제위기가 안정되기는커녕 미·중 무역전쟁에 이은 한·일 경제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당시 3억달러 무상공여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자금을 마중물로 한국을 일본의 하청기자화 하였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뽑아갔다. 동시에 한국으로의 상품과 기술수출을 통해 무역흑자를 챙겨가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률 감소를 주장해 왔지만 통화량 증발을 통한 거품경제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일본 노동자민중들의 삶은 더 악화되고 있다. 한편 아베정권은 오사카에 위치한 간사이 레미콘 노동자들에 대한 체포와 구속에서 보여주듯이 역대 최악의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선포와 함께 민족 배타주의와 한국 혐오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015년 전쟁법을 통과시킨 일본 극우 아베 정권은 평화헌법 9조 개악을 통해 군국주의화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총리가 해산권을 가지고 있는 중의원 선거에서는 집권여당(자민, 공명당)이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수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개헌 시도는 일단 무산됐지만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본 극우주의자(특히 '일본회의'그룹)들의 야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국과의 긴장을 조성하고 참의원에서 야당을 설득해 3분 2 이상의 지지를 얻어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미일동맹으로 결속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미일동맹의 하위개념인 '한미 파트너십'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미일동맹은 군사외교동맹만이 아니라 경제동맹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이 미국의 암묵적 동의하에 진행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권이 몰락하기 직전이었던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군사정보를 얻는다는 것은 명분이지만 사실은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병하려는 일본의 의도를 미국이 용인하는 것이었다. 지난 8월 22일 한국정부는 GSOMIA 종료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이 반발하고 미국이 우려를 표하자 한미동맹에 균열은 없을 것이고 일본의 태도 변화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음을 밝혔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그 서열을 분명히 정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하고 포위하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되 미국의 하위에 일본이 있고, 일본의 하위에 한국이 있는 관계다. 미일 제국주의의 동북아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남북교류진전으로 남한이 한미일동맹에서 이탈하는 것을 꺼려한다.

미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중립적 위치에서 지켜보고 있다. 한미일동맹에서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획기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주한미군주둔비를 넘어 미국의 전략자산 이동이나 전세계 제국주의 전쟁 비용까지 부담시키려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을 진행하면서도 미국과 러시아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고 한국과 일본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것을 밝히고 있다. 이란과의 핵협약 파기 후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군 파병을 요청하는 등 중동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므로써 한국을 한미동맹에서 벗어날 수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작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까지 이어졌지만 지금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대한'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2. 한일 노동자 연대

일본 아베정권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통해 어느 정도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한국의 대응에 당황해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8월 17일 일본에서 요미우리에서 이어 발행부수 2위이자

상대적 진보신문인 아사히는 사설을 통해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의 뜻을 한국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신문은 (보수)산케이-요미우리-마이니치-아사히-동경신문(진보)이다.

8월 23일 ~25일 요미우리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효과로 아베내각 지지율은 2017년 5월(61%) 이래 최고인 58%로 전달 보다 5%p 상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21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결과를 보면 자민당 35.4%(득표수 1,771만표, 지난 선거 2천만보다 감소, 전체 유권자의 20% 수준)로 연립여당인 공명당 13.05%(일본 종교 단체 기반)를 합하더라도 48.45%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그 외 입헌민주당 15.8%(1990년 후반 창당, 자민당 온건파 + 사민당 우파+ 민사당<반공주의>+ 기타, 2008년 집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후, 2012년 자민당에 정권 넘겨 줌, 현재 제1 야당, 현재 원전반대 주장, 구 민주당의 좌파, 랑고 좌파지지), 국민민주당 6.95%(당시 민주당 정권의 우파, 원전 지지파, 원전 노조지지 기반, 랑고<일본 최대 노총> 우파지지), 공산당 8.95%(제2노총인 젠노렌<100만노조>지지, 한일관계 올바른 입장), 일본유신회 9.8%(자민당보다 우파, 한국의 우리공화당, 자유한국당 우파<박근혜파>와 같은 성향), 사민당 2.1%(옛날 사회당의 우파, 원전반대, 인권, 최근 한일관계에서 올바른 입장), 레이와신센구미 4.55%(미국 센더스 같은 성향, 민주당 내부에서 갈라져 나온 한 분파<야마모토 타로, 배우 출신>, 원전반대) 등 다양하다.

1950년 7월에 건설된 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총평)는 1989년 11월 자진 해산하면서 대부분은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랑고, 제1노총)에 흡수됐다. 랑고의 좌파(일교조, 자치노, 사철총련)는 입헌민주당지지, 우파(금속 등)는 국민민주당을 지지한다.

전국노동조합총연합(젠노렌, 제2노총)은 1989년 랑고에 반대하면서 창립, 특정 정당 지지는 않으나 공산당에 가깝다. 지난 8월 15일 오다가와 요시카즈 젠로렌 의장이 민주노총 위원장 만나 <파국으로 치닫는 한일 분쟁, 한국과 일본 노동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아베 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분쟁 시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자라는 데 동의하고, 향후 한일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대항해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全勞協, 젠노쿄, 제3노총)는 1987년 11월 랑고가 설립되자 우경화에 반대한 좌파들이 젠노렌을 만들었는데 랑고나 젠노렌에 참가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그 해 12월 젠노쿄를 창립했다. 사회민주당이나 신사회당에 가깝다. 민영화에 반대했던 국철노조가 가입해 있다. 전국일반노조 등 비정규직 노조 조직화에 집중하고 있다.

AWC(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일본연락회의는 일본 내에서 반전평화, 미군기지 반대, 탈핵, 역사왜곡 저지, 노동운동, 장애인 운동, 국제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8월 15일 광화문에서 “아베정권의 제국주의 경제전쟁 규탄과 한일노동자 민중 연대 선언” AWC한일 공동 기자회견, 8월 16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전 지구적 핵 재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한일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AWC일본연락회의 기자회견문 별첨)

8월 28일 일본 의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일부 정치가들에게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틀림없이 백 가지 해가 되고 한 가지 이익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미일제국주의의 경제전쟁이자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계급전쟁이다, 그것이 비록 국가간 민족간 대립이나 전쟁으로 표현되더라도 제국주의 세력이나 지배세력의 권력이나 헤게모니 투쟁에 동원되는 것은 노동자민중들이다. 아베정권은 한국의 맞대응에 맞서 일본 노동자민중들을 총동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국의 재벌경제 체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을 앞세우고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경제전쟁을 펼치고 있다.

양국의 지배세력들은 이번 경제전쟁의 비용이나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노동자민중들에게 고통감내를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의 성과물은 자신들의 체제나 권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일미동맹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일본 아베정권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은 미일 제국주의와 공황적 위기 상황에 빠진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노동자민중에 대한 수탈과 착취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노동자민중들은 미일 제국주의 경제전쟁을 반대하고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별첨1>

<AWC일본,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강제징용재판 대법원판결을 존중하고 식민지배의 가해 역사를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와 배상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전쟁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 정부가 8월2일 내각회의가 결정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을 명한 작년 10월 강제징용재판 대법원판결에 대한 보복 곧 피해당사자의 주장을 전면부정하는 공격이며 동시에 자신을 따르지 않는 문재인정권 타도를 노리는, 트럼프의 미증마찰을 흉내 한 전쟁 선언이다. 우리는 이를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강력히 규탄한다.

첫 번째, 이번 사태 시작은 전쟁·식민지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노동자민중과 일본 제국주의 국가 권력과의 투쟁이다. 일제 국내에 사는 노동자계급인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알고 문제를 세워야 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었다, 그것에 관한 모든 문제는 1965년의 한일조약으로 해결되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합의로 다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정부에 의한 2015년 합의의 실질적 재검토와 상기 대법원판결을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어겼다'며 '국제법에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서 지난 7월1일 3개 핵심소재수출 규제와 8월2일 화이트리스트배제 결정을 강행했다.

그러나 무력공갈에 의한 조인 강제로 시작된 36년간의 식민지배는 농민의 땅과 식량을 빼앗고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수탈, 착취하며 일본의 지주와 자본을 위해서 근대화를 하고 항일투쟁과 노동운동을 철저하게 탄압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말, 이름, 문화를 빼앗는 차별동화정책으로 인간의 존엄을 짓밟았으며 아시아침략전쟁에 민중과 물자를 모두 동원하여 전시 성 노예제까지 관민이 함께 추진한, 법률적으로도 인도적으로도 용서되면 안 되는 부당한 행위였다. 또, 일본정부와 일본 대법원조차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게다가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인 피해자의 배상 청구 소송에 일본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인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해서는 개인청구를 강하게 후원해 왔다.

그런데 한국 강제징용재판 판결에 관해서는 '국제법' 즉 한일조약에 '위반하고 있다'고 허위 발언을 반복하면서 정부가 개입하여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이 판결에 대책하라며 사법에 대한 행정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 '나라와 나라의 약속'이 영원히 바뀌지 않을 리가 없다. 정권이 바뀌면 국내정책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도 바뀌는 것은 상식이다. 한국 정부에 대하여는 비난하지만 TPP 이탈이나 이란 핵합의 파기 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잇달아 깨뜨리는 미 트럼프 행정부에는 알랑거림 추종에 바쁜 일본 정부의 이중기준이야말로 규탄해야 하다. 우리는 아베 정권의 식민지배가 합법적이고 맞는 일이었다고 하는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 인식과 그것에 근거하는 부당한 시책,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아도 부당한, 식민지종주국의 발상과 같은 한국 정부에 대한 3권분립 유린 요구를 철저히 비판해서 부숴 버려야 한다.

두 번째, 일본은 극적으로 전환한 동아시아 정세 아래서 미일군사동맹을 토대로 하면서 미국의 부관으로서 군사적 주도력을 질 것과 그것을 법적으로 근거할 헌법개악을 목적으로 해서 한국을

북한 및 중국과 함께 적국으로 봤다. 이번 배제 결정은 군사적 성격을 간접적이지만 본질적으로 가지는 조치다. 일본으로부터 수출된 물자가 한국에서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는 결과 북한에 흘러나가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실은 일본에서 유출된 물자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앞으로 북한과 하나가 될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함을 말한다. 향후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통일을 향하는 남북교류 확대를 예상하며 이것을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가장 큰 위협으로 잡고 '분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군사적 성격을 깊이 지니는 것이 7·1 및 8·2 조치다.

한편 7월1일 조치는 6월 하순에 열린 오사카G20 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아베가 그 직후인 6월30일 판문점에서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과 트럼프의 '군사분계선 월북', 남북미 만남이라는 양값음에 충격을 받아 강행한 복수였다. 그러므로 조치 발동 이유 논리 구축이 제대로 되지 못해 그 내용이 우왕좌왕했다. 처음에는 강제징용재판에 대한 대처, 그다음에 수출물자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유출되었다는 군사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수출상품의 부적절한 관리다. 7·1 조치는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에서 고립되고 러시아 외교 및 G20에서도 성과를 전혀 얻지 못한 아베 정권이 전략적 전망이 없는 채 시작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실은 호랑이?)를 무는' 격이었다.

세 번째, 이번 조치는 대두하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일본 자본가들의 경계심에 따른 선제 공격이었다. 즉 한일 자본가간 투쟁이 이번 사태의 기본적 성격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일본 자본주의가 자기보다 아래에 있었던 중국에 따라잡힌지 오래되었다. 게다가 양국간 차이는 계속 확대해 갈 것이다.

한일 양국은 1인당 GDP가 거의 같아졌다. 2030~2040년대에는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이는 메이지유신 이후 이룩해 온 아시아와 세계에서의 일본 위치가 사라지고 일본회의 등 극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중국 및 한국의 아래'라는 사태가 따라오며 우익들의 자기존립성 붕괴를 뜻한다. 일본 정부가 '한국 때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7월12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회의실이 아닌 창고에서 열린 '사무적 설명회'라는 일방적인 통고로 대표되는 마치 종주국 같은 은근무례하고 교만한 태도는 한결같았다.

그런데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먼저 타격을 입을 쪽은 규제 품목을 한국 기업에 파는 일본 IT 기업이다. 몇개 기업이 거액 투자를 회수하지 못해 도산될 위기에 처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대량 실직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세계에서 드문 최신기술들이 거래처를 잃어 무용한 장물이 될지도 모른다. 일본 정부는 많지 않은 장래 성장 요인을 스스로 하나하나 짓밟고 있다. 일본 기업에는 손실이 생기지 않겠다고 한 일본 경제산업장관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만약 삼성이나 SK등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출이 멈추면 일본 소니나 파나소닉의 관련 제품 제조가 멈출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시장이 국제적으로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 언론이 거의 다 일본 정부에 경제 제재 중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고 외치며 한국 관련 기업이 필요 물자 국산화와 그 공급처를 다른 나라와 지역에서 찾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국익논자들의 기준에서 봐도 '국익'이라는 이름인 자본가의 이익을 크게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그 자체는 올바른 일본 정부 비판에 이어 '일본에 지지 않고 이긴다'고 전쟁을 선포하면서 국민 단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그것은 한편으로 노동 정책 전면 후퇴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난'을 이유로 노동자민중의 요구를 무시하고 억압하면서 투쟁을 자제하라고 강요할 위험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내년 4월 총선 및 그후 대선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7월 1일-8월 2일 사태'는 식민지 지배는 합법적이고 올바른 것이었다는 일본 극우, 자본가 그리고 국가권력에 1965년 한일협약 이전 상태로의 회귀 또는 1945년 이후 이루어진 동아시아 질서를 미일군사동맹 틀 아래서 일본이 주도하면서 전면적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다. 게다가 되돌아올 수 없는 결정적인 한걸음이자 일본의 동아시아 군사 외교 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아베 정권의 '외교군사노선의 총결산'이다.

따라서 일본 노동자 민중인 우리는 첫 번째, 한국 피해 당사자 및 아베 규탄 투쟁에 일어난 노동자민중과 연대하며 아베 정권의 강제징용재판 판결 부정과 부당한 비난, 왜곡된 역사 인식을 철저히 비판하고 규탄하면서 분쇄시켜야 한다. 일본 국내에서 민족배타주의의 폭풍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두 번째,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을 전개하면서 헌법 개악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로 돌진하는 아베 정권의 야망을 저지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세 번째, 한일 노동자민중 연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한국에서는 일본상품불매운동과 아베정권반대집회가 불같이 퍼지고 있다. 한국 노동자민중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촛불이 다시 켜진 것이다. 박근혜를 타도한 촛불 혁명이 그랬듯이 그 불이 불길이 되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 타오를 것이다. 한국 노동자민중은 일본 정부의 횡포에 맞서면서 동시에 국익론 및 국가주의를 비판하면서 재벌자본과의 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아베 정권 반대, 재벌 반대, 반전평화, 탈원전 운동을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그 노력을 지지하고 연대하며 아베 정권타도, 반전반기지반핵, 계급적 노동운동, 차별 반대, 국제연대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9.8.15.목

미일 제국주의 반대 아시아 공동행동(AWC) 일본연락회의

<별첨2>

아베정권 퇴진투쟁 결의를 밝히는 일본 전노협 성명서
한일노동자·시민의 폭거저지 연대투쟁을 위한 성명

아베정권은 8월2일, 한국에 대한 수출에 관련한 우대조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을 각의결정했다. 이는 7월 1 일, 반도체관련 3품목의 수출규제에 이어 진행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한국정부는 물론, 노동자, 시민에게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나 대규모집회 등, 아베정권에 대한 항의 목소리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아베정권은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한국의 불충분한 수출관리에 있다고 그 이유를 들고 있지만, 이번 결정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공 문제에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에 대한 미지급임금 등 배상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보복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베수상은 일본군국주의가 한국·조선(북한)의 사람들에게 들썩운 비참한 역사를 일관되게 왜곡해 해왔다.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 뜻을 밝힌 1993년 고노담화나 일본제국에 의한 한반도 식민지 지배와 침략행위를 사죄한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 대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았다. 또 제2차 아베정권 출범 이후는 일본의 전후체제 총결산으로 헌법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해 힘쓰고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멸시와 배타주의로 일본의 내셔널리즘을 부추켜 일본사회에 분단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적 분단이 일상적으로 헤이트스피치가 넘치는 일본 사회를 만들어 왔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은, 징용공 판결의 보복임과 동시에 일본국내의 배외주의를 선동하여 헌법개악을 위한 아베정권 지지율 확보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의 분노는 당연하고, 아베정권 타도는 우리와의 공통된 투쟁이다.

우리 전노협은 1989년 결성 이후 한국노동자들과 연대를 계속해 왔었다. 한국전쟁 특수로 성장한 일본기업들은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 민주화가 늦어지고 경제발전 도상에 있던 한국으로 진출해 값싼 노동력과 경제특구 등, 한국정부나 지자체의 우대나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이익을 챙겨 확대해 왔었다. 하지만 일본기업의 부당한 노무정책은 여기저기서 문제를 일으켜 노동쟁의가 일어났다. 한국 노동자들은 일본 본사와 대화를 요구하여 일본을 방문, 장기간의 원정투쟁을 싸워야 했다. 1988년의 한국스미다, 아시아스와의 투쟁 이후에도 2000년대에 들어 한국씨티즌이나 오므론 등, 재작년 2017년에는 한국산연노조의 투쟁에서 한일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벌려왔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근로권·생존권을 건 투쟁에서 전노협 동지들은 온 힘을 다해 연대하고 지원했다. 이러한 투쟁은 한일 노동자의 연대를 키웠고 문자 그대로 노동자의 국제연대를 실현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사람들의 일본정부나 일본기업에 대한 전후배상 요구 투쟁에도 연대해 왔다.

아베정권이 강행한 이번 수출규제가 한일 양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명백하다.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생활 뿐만 아니라 일본의 노동자나 시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가져 올

것이다. 아베수상은 당장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과거 가해 역사를 직시하여 진정한 외교로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 전노협은 한국의 노동자, 시민들과 연대하여 아베정권의 폭거를 저지하고 아베 퇴진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6일

전국노동조합연락협의회(젠노쿄)

65체제의 균열과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

장혜경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책위원장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서고 한국정부도 이에 맞서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선언 및 독도수호 훈련에 나서면서, 한일 갈등이 격화되고 있음. 본 토론문에서는 첫째, 최근 한일갈등의 근본 원인과 최근 한일갈등이 갖는 함의를 살펴봄. 두 번째로는 한일갈등이 국내 계급투쟁 지형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마지막으로 현 동북아 정세에서 제기되는 노동자민중운동의 과제와 대응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1. 최근 한일갈등에 대한 기본 이해

(1) 한일 갈등의 원인, 65년 한일협정

- 최근 한일갈등의 원인은 일본이 과거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한일 정부 간에 체결한 65년 한일협정체제에 있다. 즉 한일협정의 제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하였으나, ‘어느 시점에서 무효냐’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를 봉합. 그 결과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인정을 받아내지 못했음.

- 부속조약인 ‘한일재산 및 청구권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도 마찬가지.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한다고 합의했으나, 무상 3억 달러의 성격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갖지 못함. 그 결과 일본 정부는 한국에 제공한 자금이 독립축자금,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음.

- 부속조약에 있는 “...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는 한일 간의 청구권 문제에 대한 최종적 해결을 못박고, 강제징용 및 정신대 피해자 등의 개인 청구권을 봉쇄하는 기반으로 작용함.

(2) 한일협정의 뿌리, 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뿌리는 51년 일본과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 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있음.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에게 태평양 전쟁에 대한 책임만 묻고 식민지배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 조약임. “일본이 전쟁 중 일본에 의해 발생한 피해와 고통에 대해 연합국에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의 범위를 2차 대전 중 일본이 침략한 나라로 제한함. 또 한국정부를 강화회담 조인국에 참여시키지 않음으로써(대일전의 전승국 지위 갖지 못함으로써), 한국은 일본에 합법적으로 병합되었다가 다시 분리하여 독립한 꼴이 되었음. 결국 한국은 일본 식민지배의 책임과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함. 샌프란

시스코 조약 결과, 식민지배 배상 문제는 청구권 문제(두 나라가 분리됨으로써 생긴 '재정적, 민사적 채무-채권 관계')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65년 한일협정의 기본틀을 규정짓게 됨.

- 51년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은 대소 봉쇄 목표 하에 일본을 하위파트너로 삼은 동아시아 패권전략 때문. 같은 날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65년 '한일협정' 역시 대소련 봉쇄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려 한 미국의 개입 하에, 한일 정부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려 체결된 것임.

- 따라서 65체제는 전후 왜곡된 한일관계를 만든 체제이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한미 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 미일 간의 미일안보조약을 매개로 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의 다른 이름이기도 함.

(3) 65체제의 다른 이름, 한미일 동맹

- 한미일 동맹은 65년 이후 그 성격을 달리하며 유지되어 옴. 대소 봉쇄를 주목표로 한 한미일 동맹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인 2000년대 들어서는 북핵위기를 명분으로 한 대중국 봉쇄 동맹으로 그 성격이 전환됨. 이는 미제국주의의 이해에 근거한 것임.

- 냉전해체 이후인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세계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것에 맞춰짐. 동시에 미국은 세계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고자 '지역균형자'란 이름하에 해외주둔미군을 유연하게 재배치한다는 전략(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함. 이에 따라 대소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으로 그 성격이 전환하였음. 더불어 전략적 유연성 전략에 따라, 주한미군은 동북아 분쟁 곳곳에 참여하는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그 성격이 바뀌었음.

- 중국 봉쇄를 위한 한미일 동맹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은 일본 우익의 전쟁가능한 국가화와 함께 가고 있음. 즉 미국은 해외미군 주둔비용 절감을 위해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와 2016년 한일군사보보협정 체결 종용, 그리고 최근 유엔사의 역할 강화 시도로 드러나고 있음.

- 2019년 1월, 유엔군사령부는 전력 제공국의 법적 자격을 "유엔 회원국이라면 전력 제공국이 될 수 있다"로 해석하면서,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일본을 유엔사에 정식으로 포괄하려 하고 있음. 이는 군사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자, 주한미군의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 한반도 유사시 정치적으로 더 상위인 유엔사를 통해 연합사를 주도하겠다는 구상. 나아가 미국은 유엔사 역할 강화를 통해 유엔사를 중국을 견제하는 동아시아판 나토(NATO)로 성장시킬 가능성도 있음.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라는 다자적 체제를 활용하여 대중포위전략을 구사하겠다는 것. 일본에는 유엔사 후방기지가 7곳 존재하는데, 미국의 유엔사 역할 강화 움직임은 이미 유엔사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일본을 전력 제공국으로 '공식' 인정하려는 것임. 이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유엔군 깃발 들고 한반도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함. 최근 미국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한일에 요청한 것 역시, 하위동맹국을 자신들의 패권전략에 동원하고자 하는 것임.

-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은 올해 미국 정부의 중거리핵전략(INF) 파기와 이와 연동한 동아시아

지역에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기도로 이어지고 있음. 이는 사드배치보다 더 격렬한 중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데,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강화의 악순환을 가져오면서, 한반도가 미중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안임.

- 즉 65는 한일협정체제는 한미일 동맹체제의 다른 이름으로, 이 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긴장격화와 한반도의 희생양화는 막을 수 없음.

(4) 65체제의 균열

- 최근 한일 갈등은 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문제점에 근거한 65년 한일협정체제의 모순의 폭발한 것임. 즉 65년 한일협정체제의 근본모순(일본 식민지배 불인정, 개인청구권의 봉쇄)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이에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임.

- 즉 65년 이후 봉합되어온 한일협정의 근본적 문제가 일제 식민지배 피해당사자들의 투쟁으로 드러났고, 피해당사자들의 요구와 대법원 판결은 65체제를 유지한 채,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일본 우익(아베 정부)의 전략구상과 정면 충돌한 것. 따라서 아베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65체제의 균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실제 아베정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대한민국 경제보복에 대한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첫 단계로 수출 규제, 2단계로 화이트국가 제외를 감행함. 즉 아베정부는 65체제로 형성된 미-일-한국의 위계화된 질서를 재확인하고 강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감행한 것.

-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맞대응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선언으로 나섬으로써, 65체제의 균열지점이 더욱 커짐. 물론 문재인 정부가 대응은 한미일 동맹은 깨려는 의도보다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를 철회시키기 위한 카드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 그러나 피해당사자들의 투쟁이 대법원 판결을 낳고, 촛불항쟁이 대법원 판결을 낳은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최근 한일갈등이 65체제의 근본적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현 한일갈등 사태는 65체제에 대한 균열을 의미함. 따라서 핵심문제는 이 균열이 65체제의 해체로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개입 등으로 다시 봉합될 것인가임. 65체제의 봉합이 아닌 해체를 이끌 힘은 바로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목소리임.

(5)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한반도-동북아 평화의 길은?

- 2018~19년 동북아 정세는 크게 세 축의 움직임이 상호 교차하면서 전개됨. 첫째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대표되는 미중갈등(차이메리카 시대의 종언)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 마지막으로 최근의 한일갈등임.

- 이것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장기적 침체와 미해게모니의 약화 속에서, 정치의 경제화(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경제보복) 현상이 나타나면서, WTO 통상규범이 한계가 드러나고 신자유주의의 자유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임.

- 둘째,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장기적 침체와 미해계모니의 약화 속에서 추진되는 미국의 패권 전략은 일본의 전쟁가능한 국가화 전략과 맞물려, 동북아에 신냉전질서(제국주의 지배질서)를 형성·강화해가고 있다는 점.

- 셋째, 작년에 형성된 한반도의 긴장완화국면은 이러한 동북아 지형과 상반되는 경향을 띠었지만, 한반도 평화국면이 미제국주의 패권전략이 유지되는 선상에서 진행되는 한, 그 한계는 분명함. 53체제(정전협정체제이자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 주둔의 근거)의 해체는 65체제 해체를 위한 중요 계기가 될 수 있음. 53체제의 해체가 65체제의 해체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즉 미중 패권경쟁 유지와 한미(일)동맹이 유지되는 틀 안에서의 한반도 냉전해소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음.

- 따라서 한반도 정세변화를 통한 53 체제의 해체와 한일 갈등으로 촉발된 65년 체제의 균열을 연결시켜내면서, 53체제와 65체제의 동시 해체를 추진하는 전략을 통해,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2. 필요한 것은 한일(동북아) 시민(민중)의 연대

(1) 애국주의 열풍, 누가 이익을 보는가?

- 후퇴하는 노동권, 대노동 공세

- 한일갈등이 터지자, 자본의 공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자본은 “소재·부품 국산화 막는 망국병” 운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완화를 요구함. ‘한국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R&D 분야 프로젝트의 추가연장근로 허용, 핵심 소재 생산 전기로 감면, 세제 혜택 확대 등도 요구함.

- 정부 역시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반도체 소재 부품 R&D 분야 주 52시간제 예외업종 지정,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재량근로제 적용,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소재부품 관련 인허가 절차 신속 진행, 화학물질 생산규제 완화, 의료민영화의 일환인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관련 입법 등을 추진함.

- 더불어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노동운동을 압박하고 있음. 촛불항쟁때 적폐세력이었던 재벌총수는 애국자로 귀환함. “일본 무역도발에 힘합친 현대차 노사...8년만에 파업않기로” 기사가 보여주듯이 노동자투쟁에 대한 압박 공세가 강화될 것임. 즉 자본과 정부는 국민의 애국심을 활용하면서, ‘국익’이란 이름으로 친자본적 규제 완화와 반노동적·반민중적 정책 적극 추진 중.

- 정부는 애국주의 프레임으로 정치적 지지율 상승도 노림. 정권 실세인 조국의 ‘애국이나 이적(利敵)이나’ 프레임, 서울 중구청장의 No Japan 깃발 사건 등이 대표적임. 한일 갈등과 국민의 분노를 적극 활용하여, 정부는 지지율 상승을 적극 꾀하고, 자본은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고 노동권 및 국민 안전권을 침해하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민중이 애국주의·

민족주의에 갇히는 한, 자본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낼 수 없음.

- 아베 정부가 전쟁가능한 국가화를 지향하면서 일본 내에 혐한감정을 일으키듯이, 한국의 정부와 자본도 반일과 애국이라는 프레임으로 친자본정책을 강화하면서 노동권과 시민 건강권을 침탈하고 있는 것.

(2) 한일 민중(시민)의 대결이 아닌, 한일 민중(시민)의 '연대'

- 한일분쟁을 매개로 한 친자본적 규제완화와 애국주의 고양은 자본과 정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 큼. 이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갈등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가를 말해줌. 즉 문제는 '아베 정부'이지, 일본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 따라서 현 한일 갈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애국과 반일이 아니어야 함. 민족주의는 아베정부가 의도하는 것(일본 국민 내에 혐한감정 고조)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며, 한국정부와 자본의 애국주의 프레임에 노동자민중이 갇히면서, 자본의 공세를 제대로 막아낼 수 없을 것임. 현 정세에서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노동관련법 개악 공세가 탄력을 받으며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가능성이 큼.

- 대외문제와 국내문제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 프레임 극복은 중요함. 아베 정부의 보통국가화 전략은 국내 노동운동-민중운동 탄압과 궤를 같이 함. '민중연론 참세상'에 실린 "아베, 전후 최대의 노조 탄압, 노동운동에 연대를(소영호)"(8월 13일자)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아베정부의 노조탄압은 한국의 87년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라 함. 또 일본 정부는 2017년에 이미 '생각을 처벌하는 법'인 '공모죄'를 만들어 파시즘적 탄압에 나선 바 있음. 즉 과거 1930년대 일본처럼 밖으로는 '군국주의화'로, 안으로는 '경찰국가화'로 나가고 있음.

-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한일 민중의 연대가 중요함을 시사함. 한일 갈등의 근본적 불씨가 된 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일제의 식민 지배는 한일 민중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거 한·일 지배세력이 만든 결과물. 한일협정이 뿌리가 된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마찬가지. 따라서 한일협정을 계기로 형성된 왜곡된 한일관계를 교정할 힘도 한·일 양국 민중의 연대에서 나옴. 따라서 우리의 길은 민족주의와 반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과거 식민지배 사과 - 일본의 군국주의화 반대 - 한일 양국 노동자·민중의 권리 침탈 반대 - 평화롭고 호혜로운 한일 관계 재정립' 방향 아래, 일본 민중(시민)과 연대하는 것이어야 함.

3. 과제와 대응방향

(1) '반제(국주의)-반전-평화'와 '노동'의 관점에 선 동아시아 민중(시민)의 연대

- 미중 갈등,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강화를 핵심으로 한 동아시아 긴장격화 맞선 동아시아 민중(시민)의 연대

① 65체제 종식에 근거한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

-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대법원 판결 이행),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 사과’라는 공동요구 아래, 한일 시민간의 연대활동을 조직해 나가야 함. 나아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화를 추진하는 한 축인 ‘한일정보보호협정’을 완전히 폐기시켜야 함. 유엔사가 공식추진 중인 ‘한반도 유사시 일본 병력 제공’의 공식화를 막아 내야 함. 이에 기초해 평등하고 평화로운 새로운 한일 관계가 수립되도록 투쟁해야 함. 균열이 생긴 65체제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해체시켜야 함.

②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투쟁

- 65체제는 53체제를 그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반도 냉전질서의 해체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지렛대가 되어야 함. 이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투쟁은 미제국주의의 한반도 영향력을 유지하는 고리를 끊어내는 투쟁이 되어야 함.
- 이에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투쟁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남북간 획기적 군축, 한반도-동북아 비핵지대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폐기가 되어야 함.

③ 노동의 관점에 선, 한일 노동자연대

- 정부와 자본의 반노동공세에 맞선 투쟁 조직화
- 일본에서 진행되는 노동탄압에 맞선 연대

(2) 동북아 정세 변화, 반자본(주의) 전망 아래, 반자본 투쟁과 반제-평화투쟁의 결합

- 한국사회에는 중층적 모순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정전체제인 53체제, 형식적 민주주의체제인 87체제, 신자유주의 97체제가 그것임. 이중 53체제는 65체제의 기반.

- 한반도에 형성된 대화국면과 최근 한일갈등은 53체제와 65체제에 균열을 내면서 이 체제를 해소하는 투쟁을 전개하는데 유의미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음. 그리고 노동자민중의 대응과 투쟁에 따라 53체제의 해체와 한일관계 재조정의 구체상이 드러날 것임. 이에 노동자민중운동은 반제-평화의 관점 아래, 53체제와 65체제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함.

- 한편, 한국사회에서 53체제의 해소는 53체제, 87 체제, 97 체제의 모순이 응축된 남한사회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87체제의 문제점과 신자유주의 97체제의 문제점이 한국사회의 핵심적 문제로 등장함을 의미함. 이는 반자본(주의) 지향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됨을 의미.

- 이에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서, 노동자민중운동이 반자본(주의) 지향의 전략을 수립하고, 반자본 투쟁과 반제-반전평화 투쟁을 결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제기됨.

한일 갈등의 본질: 미·일 제국주의와 문재인 정부의 모순

김하영(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장, 운영위원)

[이 글은 2019년 8월 8일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이다.]

진보·좌파 일부를 포함해 흔히들 일본의 경제 보복을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한다. 일본 아베 정부가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흔들기(내정간섭)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저지하는 것이 아베 정권의 진정한 속셈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런가?

많은 한국인들이 아베 정부의 뻔뻔스런 과거사 부정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식민 지배의 기억이 대중 의식 속에 살아 있어서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를 현재 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 놓고 이해해야 한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단지 역사 해석이 아니라,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현재 일본이 벌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은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역사적 변화를 간과하면서 현재를 단순히 과거(“경제 침략”이나 민족 억압)와 똑같이 보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변화를 깨닫지 못하면 한국 지배계급(또는 그 한 분파)이 제국주의에 맞설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어리석은 기대를 부추긴다. 변화를 직시해, 현재 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이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 국가가 하는 구실을 포착해야 한다. 둘째, 한일 갈등을 아시아(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떠오른)라는 더 큰 틀 속에서 조망하면 단편만 보는 잘못을 피할 수 있다. 시야를 한반도 주변에 가두면 **세계** 체제로서의 제국주의와 그 현 국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 결과 한반도를 둘러싼 사건들의 함의도 알기 어렵다.

1) 과거사 문제와 현 제국주의 질서

그러면, 과거 전쟁범죄를 부정하면서 현재 아베 정부가 벌이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에서 일본의 위상과 개입력을 높이고자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아베는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 길을 더 확고히 다지려 한다.

일본이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아시아·태평양은 복잡하고 모순이 큰 지역이다. 중국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일본·한국을 비롯한 지역 주요국들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해짐과 동시에, 정치·군사적 긴장과 갈등도 심각하게 증대했다.

이 정치·군사적 긴장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비롯한다.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경쟁국들을 포섭해 중국을 포위하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과 인도를 동맹의 주축으로 삼고 그 하위에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묶어 두고 싶어 한다.

아베는 총리 취임 얼마 후인 2013년,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며 “일본의 귀환”을 선언했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전략을 본격화한 지 1년여 만이었다. 그 얼마 전 미국은 일본 하토야마 총리를 굴복시켰다. 하토야마는 “탈미입아”(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을 중시하겠다)를 선언하고 주일미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후텐마 공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 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저돌적인 정치·군사적 조치를 마다하지 않는 세력 과시를 해 왔다. 다 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적대는 일본이 과거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서라기보다, 미국과 동맹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데서 비롯하는 것이다.

과거사와 현재 제국주의 질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후자를 위해 전자가 이용(부정, 왜곡, 타협 등)되는 것이지, 과거사 때문에 현재의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다. 과거사는 중국에게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을 결속시키기에 유리한 쟁점인 한편, 일본에게는 중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아시아 국가들을 중국 포위 전략에 끌어들이는 데에 걸림돌이다.

그렇잖아도 심각한 이 지역의 복잡성과 모순은 2008년 이후의 장기 경제 침체와 트럼프의 등장으로 한층 증폭됐다. 특히, 중·미 무역전쟁은 이 지역의 기존 생산분업 체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 무대에 만들어 낸 틈을 경쟁국들이 서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메우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럼에도, 특정 방향 없이 뒤엉켜 자란 나무만 보지 않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새처럼) 전체 숲을 보면 아시아 긴장 증대의 핵심을 짚을 수 있다. 그것은 부상하는 중국과 그것을 저지하고 패권을 지키려는 미국의 경쟁이다.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일본이 미국의 핵심 동맹이고 한국은 그 하위 파트너 구실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2) 한반도 주변에 국한된 시야, 핵심을 놓친다

진보·좌파의 많은 사람들은 최근의 한일 갈등을 이런 맥락으로부터 떼어 내어 이른바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본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은 평화로 향하는 한반도 정세 변화에서 배제돼(“패싱”) 존재감이 약화되고 불안해진 일본이 제 위상을 확인시키고자 벌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견해에는 북미대화(와 그 지렛대로 여겨지는 북한 핵무기)에 대한 착각, 한국 정부의 주도력에 대한 착각, 미국과 일본의 균열(세계 체제의 다극화 정도)에 대한 과장 등 여러 혼란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등장 이후의 불확실성은 이런 혼란에 일조했을 법하다.

무엇보다 이런 견해는 시야가 한반도로 국한된 탓에 그 바깥에서 벌어지(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핵심을 놓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제국주의를 **세계적 체제**로 보지 않고, 한반도와 특정 강대국의 관계 문제로 협소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분석의 출발점으로 삼는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미국은 일본을 “패싱”하고 있지 않다. 올해 6월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일본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동맹으로 규정했다.

트럼프 시대에도 미국의 “아시아 중시”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 준 이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군사적 급부상이 21세기를 규정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부상하는 중국이 이 지역 경제 질서와 안보를 흔들고 아시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미일 동맹을 주축돌 삼고 그것을 중심으로 인도·호주·한국·아세안 등 동맹국들을 연결시킴으로써, 중국에 맞서 지역 “평화와 번영”(즉,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보고서는 대만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이 얼마나 공세적인지 잘 보여 준다. 많은 분석가들은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이런 가능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이런 전체 그림을 보지 않은 채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지역 평화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양 착각하고 일본 “패싱”이라는 그릇된 인상에 기대어 한일 갈등을 보면, 반제국주의 운동의 핵심

쟁점과 대상을 놓치게 된다. 아시아의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미일 동맹과 그에 협조해 온 한국이 문제인데, 마치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 세력을 대표하고 이를 망치려는 일본 제국주의만 문제인 것처럼 말이다.

3) 민중주의(진보 포퓰리즘) 전략의 노동개약 반대는 불충분하다

일본 제국주의 반대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한국 진보·좌파는 일본의 과거사 부정과 군사대국화에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 정부를 일본에 맞서는 같은 편이라고 믿고 지지하는 입장이다. 진정한 진보·좌파라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면서 그와 독립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해야 한다.

물론 노동운동 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을 명분으로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비판은 완전히 옳다. 그러나 불충분하다. 정부의 노동정책만 문제이고 외교·안보정책은 이력저력 관찮은 게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불충분한 태도로는 규제 완화와 노동시간 연장 반대도 효과적으로 하기 어렵다. 한일 갈등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 정부 비판을 삼가고 국민(민족)적 단결을 지지하면서 노동개약에만 반대한다면, 설득력과 입지가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민족)적 단결의 분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노동자 희생 강요를 정당화하기 쉽다(IMF를 불러들인 경제 공황 때 금 모으기 운동에서 보았듯이). 정의당이 경제보복 대책 민관정협의회에 참여한 것이 안타까운 까닭이다. 비록 규제완화와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표명했지만 이는 그 안에서 군색하고 마이동풍일 뿐이다. 대국민 정치적 상징이라는 면에서는 더욱 그렇다.

진보·좌파는 한일 갈등 문제를 놓고 포퓰리즘(민중주의)이 아닌 대안적 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 해결책이 설사 단기적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못 낼지라도 말이다. 노동개약에만 반대한 채 한일 갈등 문제에서는 포퓰리즘 정치를 절반쯤 수용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폭로하고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반제국주의 노선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지지하고 협조해 왔다. 미국의 전략이 아시아 긴장의 원인이자 일본 제국주의 발호의 발판인데도 말이다. 이것이 자유한국당만의 문제일까? 민주당 정부는 달랐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했는데, 그 핵심은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뿐 아니라 중국과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게 도와 주는 것이다. 한국 영토를 대중국 발진 기지로 내 준 셈이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결정적 협조였다. 중국 봉쇄를 위한 전략적 기지라고 비판받는 제주 해군기지의 신설을 결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다.

문재인 정부도 다를 바 없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드 문제를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큰소리 치더니, 집권 이후 바로 배치해 버렸다. 사드 반대 운동을 분열시키면서 미국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오랜 염원으로, 한·미·일 3국의 MD(미사일방어) 구축 협력의 한 고리이다. MD가 중국 포위 전략의 핵심적 일부임은 전혀 비밀이 아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3국의 MD 연결을 위한 중요한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한국과 일본의 군수지원과 정보교류가 원활해져야 한국과 일본의 미사일방어체계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재인은 박근혜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사드 배치로 완성해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진지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를 기대할 수 없는 까닭이다. 정부 일각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론은, 그 중요성을 전제로 미국의 중재를 끌어내자는 지렛대론일 뿐이다.

역대 민주당 정부는 “균형”(미국과 중국 사이)을 말하면서도 실천은 늘 한미동맹에 충실했다. 그들에게 단호함, 확신, 자신감 부족이 문제였는지는 몰라도, 결론이 문제였던 적은 없다. 말에 속지 말고 실천을 봐야 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의 반일 투사 행세 이면에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4) 지금도 계속되는 민주당 정부의 대일 협력

최근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인도태평양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공세적 전략으로, 일본이 주축 구실을 한다. 그동안 이에 대한 지지 표명을 꺼렸던 문재인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지 입장을 밝혔다. DMZ(비무장지대)에서 열린 깜짝 북미 정상회담에 의해 가려졌지만, 당시 미국 국무부는 트럼프의 한국 방문 성과로 “인도태평양전략 협력 심화”를 꼽았다. 한국 경제지 등 친기업주 언론들은 만시지탄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영했다.

최근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을 탈퇴하고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인도태평양전략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은 INF조약 탈퇴가 중국을 겨냥해 미사일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등과 함께 미사일 배치 후보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것이 한 달 전 문재인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 협조 표명과 무관한 것일까?

만약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이 배치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제주 해군기지, 사드 배치에 이어 아시아 불안정을 몇 곱절 끌어올린 주역이 될 것이다.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로 “세계는 핵전쟁을 제어하는 장치를 잃게 됐다”고 논평했다. 아시아는 제어 장치를 잃은 핵무기 전장이 될 수 있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도 응하려 한다. 미국의 이란 압박에 동참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2003년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한국도 참전했다)에서 미국이 패배한 반면, 이란이 이 지역의 진정한 승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의 세계 패권 유지에 협조하는 것이자, 인도의 서해를 경유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로 이어지는 미국과의 인도태평양 군사 협력에도 부드럽게 편입되는 길일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지정학적 중요 쟁점들 - 인도태평양전략과 중거리 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 에서 한국 정부는 한결같이 일본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제국주의에 맞선다고?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억압받는 처지이기 커녕 일본 제국주의의 한 급 아래 협력자이다.

5) 강대국의 압박이 다 민족 억압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일본의 경제 보복은 강대국의 압박 아닌가? 그렇다. 지금 일본은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데서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타협을 얻어 내려 한다. 아시아·태평양에 걸린 일본의 판돈이 큰 만큼 일본의 경제 보복은 강하고, 장기화될 수도 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경제적·군사적 힘을 과시하고 사용하는 것은 현대 자본주의의 일상사다. 세계 자본주의는 위계적으로 이뤄진 살벌하고 냉혹한 체제이다. 가령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다른 강대국 지배계급들과 갈등을 빚는다. 단지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뿐이 아니다.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와 자신의 세계 전략을 수용하게 만들려고 전통적 동맹국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고 갈등을 일으킨다.

일본의 아시아통화기금 설립 방해(1990년대 말),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프랑스와의 갈등(2000년대 초반), 일본 내 주일미군 기지 이전 철회 압박(2009년), 유럽 지배계급들과 다방면에서의 노골적인 갈등(최근) 등이 그런 사례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국가들이 미국의 종속국인 것은 아니다. 또, (중국과 달리) 경제적 갈등이 군사적 갈등으로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식민지 경험이 있는 나라와 강대국 사이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해 보일 수 있다. 외세의 압박에 대한 기억과 반감이 있어서다. 그러나 옛 식민지였던 국가들의 일부가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자본 축적의 중심을 이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제국주의 질서 속의 틈새와 모순 덕분이었지만 말이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 강국의 대열에는 끼지 못하지만, 경제 규모(GDP 기준) 세계 12위, 군사력 세계 7위의 중간 규모 강국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등하지는 않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과거 식민지 종속 상태와 다를 바 없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오늘날 한국 지배계급은 일본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제국주의에 협력자 구실을 한다. 그래서 그 질서의 유지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들 또는 그 한 부분이 노동자·민중과 한편이 돼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기대하는 것이 환상인 이유다.

마찬가지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을 (식민지) “경제 침략”과 동일시하는 문제점을 보여 준다. 한국인이 단결해 일본산 불매로 대응함으로써 일본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그러면 일본 노동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일본(특히 그 생산물)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공상적이고 정치적으로 퇴보적이다.

생산이 국제 분업 구조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오늘날, 일국적 경제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다. 한국 지배계급은 기껏해야 국제적·지역적 분업 구조의 일부를 재편하면서 그런 조정과 효율화에 따른 고통을 노동계급에 전가하려 할 수 있다.

이런 때 노동운동이 일본에 맞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보면, 고통 전가에 맞서 노동계급의 조건을 방어하기가 힘들 것이다. 민족주의(그리고 포퓰리즘) 열풍 속에서는 한편으로 국내 지배계급과의 협조(노동자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국민의 이익을 위해 힘을 합치자며), 다른 한편으로 일본 노동계급과의 반목이 조장되기 쉽다.

6)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

이 점에서 민주노총(산하 노조)의 일부 지도부가 한일 갈등을 “경제 침략”으로 선불리 규정하고 불매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안타깝다. 노동운동이 조종동 등과 자한당만을 친일 적폐세력으로 규정해 반대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을 삼가고 사실상 협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고 노동운동이 약화되기 쉽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민족주의·포퓰리즘 열풍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미 두어 달 전부터 정세가 정부와 집권당에 유리하게 시나브로 기울어 왔다. 공식 정치 영역 내에서 여야 세력관계뿐 아니라, 정부와 노동운동 사이의 관계도 기류가 그랬다. 주로 노동운동이 포퓰리즘(민중주의)적으로 대응한 효과였다.

노동운동은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 자국 정부와 (일부)자본가들의 편을 들고 협조해선 안 된다. 그것은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민족주의·민중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적인 반제국주의 운동을 해야 한다.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국제)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일본 제국주의와 그에 협조하는 한국 정부에 반대하고, (경제 침략 규탄 불매 운동이 아니라) 아시아 노동자·민중의 공통의 이익인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일본 평화헌법 개정 반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에 실질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트럼프 시대, 일본의 고민과 한·일관계

노동당 이견수 비상대책위원

1. 한반도를 둘러싼 지평의 변화 :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

-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세계질서도 요동을 치고 있음. 미·중 패권경쟁은 날로 격화되고 있고, 불붙기 시작한 한·일의 역사분쟁이 동북아의 전후 정치지형을 규정짓던 기본질서를 흔들고 있음.
- 세계정세는 격화된 미·중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새로운 지평에 섰음. 미국은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시킴으로써 중국을 변화시키려던 노력을 포기하고, 유일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반드시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음. 이와 같이 중국을 찍어누르겠다는 기세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면서 앞으로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세임.
- 한·일관계는 전후 동아시아 냉전질서의 기초를 놓은 샌프란시스코 협정체제와 한·일협정체제가 와해되기 시작하고 있어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을 빌미로 수출규제를 전격적으로 단행함으로써 과거의 질서로 복귀하고자 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어서 한·일협정체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음.
- 한편, 최근의 한·일관계에 대해서 운동진영 내부에 심각한 인식상의 오류와 지체가 있어서 관련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과 활발한 토론이 필요함. 물계급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반일애국주의에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일본의 수출규제를 낳은 민주주의적 관점을 동원하여 ‘경제침략’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업가들을 애국자로 묘사하며 친자본정서를 유포하기도 함. 또한 좌파 중에는 최근의 급격한 세계정세 변화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함부로 경제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제국주의 간의 ‘경제전쟁’으로 파악하여 반아베 투쟁조차 반일민족주의로 규정하는 등 우려되는 점이 있음.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일본의 관점에 서서 이해를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2. 구조 1 : 미·중 패권경쟁

(1)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개념의 대두

- 최근 들어 ‘인도-태평양’(Indo-Pacific)이라는 개념이 회자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중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후 이 개념이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이래, 미국의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a free and open Indo-Pacific)’이라는 개념이 언급되었음.

- 이 개념은 원래 일본의 아베 총리가 주장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에서 처음 소개되었음. 대비되는 개념으로 중국의 ‘일대일로’가 있으며, 인도-태평양은 중국의 대전략인 ‘일대일로’의 해양실크로드(=일로)와 지리적으로 중복되는 전략적 공간임. 따라서 일본에서 이 개념이 어떤 배경과 의도에서 나온 것인지 그들의 관점에서 추적하는 것이 객관적 이해를 위해서 필요함.

(2)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

- 전체 무역량의 99% 이상을 해상무역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있어서 중동으로부터 말라카해협, 남·동중국해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함. 일본에게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통적으로 상업적 공간이었으나, 중국의 부상으로 역내 세력권이 확장되면서 지정학적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되었음. 최근 이 지역에서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음.

○ 아태지역 전략 중심의 이동

- 전통적으로 이 지역은 해양국가인 일본이 1차 대전 이전부터 유럽과 통하는 전략적 루트였고, 2차 대전 무렵에는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통해서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경영하던 지역임. 전후 일본은 이 지역을 태평양을 중심으로 사고하며 선진 공업국간 상업과 교류의 장으로 개념화하였고, 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등을 거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에 이르기까지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해양 네트워크를 강조하였음.
- 2011년 일본의 전체 부가가치 수출 중 RCEP-5(한국, 중국,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7%로, TPP-4(미국, 호주, 멕시코, 캐나다)의 21.7%보다 높음. 중국의 비중은 18.2%이고 미국은 16.0%인데, 2000년 중국이 7.3%, 미국이 28.9%였음을 감안하면 커다란 변화임.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을 통해서라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최우선의 관심사임.
- 한편, 21세기 들어 일본은 그동안의 동아시아 중시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으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대중국 견제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이 지역에서 비즈니스, 투자, 협력의 공간으로서 해양 개념은 중국의 부상으로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임. 일본은 1991년 중국이 APEC 가입을 계기로 자유주의 지역질서에 편입되어 적응해 갈 것이라 믿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이 동아시아 개념을 내걸고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며 아태 공간을 잠식함.

- 강대국으로 급부상하는 중국과 달리 미국의 힘과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음. 더욱이, 2010년과 2012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요)와 관련하여 중국과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경험함으로써 일본은 미국의 보호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 중대한 무력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자각함.
-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항하고자 일본은 다자주의적 접근을 모색하였으며, 고이즈미 내각이 제안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서는 지역 범위를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및 남아시아(인도) 지역 등 ‘광역(廣域) 동아시아’로 확대되기 시작함. 2012년 말에 출범한 제2차 아베 내각 하에서도 일본 정부의 다자주의적 관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미국, 인도, 호주 등 4국(QUAD)을 중심으로 전략을 추구함.

○ 일본 관점의 인도-태평양전략

- 아베 내각은 특히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에 주목하여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2015년부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Free and Open Indo-Pacific Strategy)’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은 일본 외교의 새로운 전략공간으로 부상함. 아베 총리는 2016년 8월, 제6회 아프리카 개발 회의에서 두 개의 대륙과 두 개의 대양 즉, 태평양과 인도양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일체로 파악하여 접근하고자 하는 지향을 표명함. 특히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중간에 위치한 인도를 지역 질서 구축에 관여시킴으로써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고 인도양에서 태평양에 이르는 수송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음.
- 2017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중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거론한 것은 이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아베 내각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지만,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차이가 있음.
- 대상 지역과 관련하여 일본은 아프리카는 물론 아세안을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은 미·일·인·호 4국(QUAD)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등 군사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무역자유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중심으로 한 다자주의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를 자처하고 있으나, 미국은 양자 FTA를 통한 자국의 무역적자 해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외무성 중심으로 입안될 당시에는 중국의 해양진출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지만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경제산업성 및 경제계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군사적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 일각의 경제중심 경향(지경학)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
- 한편, 2018년 말에 일본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용어에서 인도-태평양 ‘구상’으로 선회함. 군사용어인 ‘전략’이라는 개념으로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아세안국가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어렵다는 고려도 작용했지만, 최근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급진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실제로 일본은 중국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 등에 모두 참가하고 있음.

- 2018년 10월 베이징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에 대해 ‘경쟁의 시대에서 협조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확인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서도 일본은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호응하고 있음. 일본에게 중국은 견제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협력의 대상이기도 함. 일본은 ‘제3국 시장에서의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미·중 사이의 선택을 피하고, 현안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임.
- 미국의 힘과 영향력이 쇠퇴함에 따라 미국은 지역 해양안보 분야에 있어서 동맹 및 파트너에 의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미국 없는 인도-태평양은 일본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이며, 일본이 이에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음. 일본은 이 지역에서 쇠퇴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음. 이를 통해 일본은 미국을 아시아에 묶어두는 동시에 미국의 힘이 약화되어 이 지역에서 발을 빼는 경우에 대비하고 있음. 한편,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미·중이 자신을 제치고 전격적으로 화해하면서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상호교역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 2005년 6월에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아시아와 태평양, 남미를 연결하는 4개국 체제로 출범하였고(P4), 2010년부터 5개국(미국, 오스트레일리아,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이 추가로 참여하였음(P9). 2013년 일본이 이 협정에 가입하였고, 2015년 10월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칠레가 TPP 협정을 타결함. 2018년 12월 30일에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발효됨(P11).
- 미국은 2008년 9월 부시 행정부 임기를 수 개월 남기고 TPP 참가에 관심을 보였으며,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12월 TPP 협상 참가 의향을 명확히 밝힘. TPP 참가는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전략에 따른 것임. 부상하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아시아만의 경제통합을 막는 동시에 안보 면에서 미국과 아시아를 잇는 연결고리가 필요했기 때문임. 이를 위해 P4에서 더 나아가 캐나다, 멕시코, 일본과 한국, ASEAN 회원국 등으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즉, 오바마 시기에 미·일 양국은 TPP 체결을 통해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와 ‘룰(rule) 선점’의 효과를 통해 중국의 중화경제권 전략에 대응하고자 하였음.
- 원래 일본은 FTA 체결 상대로 동아시아를 중시하여 최초로 한·일 FTA를 추진하였으나 2004년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되고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그 다음 단계로의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후 한국이 칠레를 시작으로 ASEAN, 인도, EU,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등

FTA 체결속도에 가속도가 붙자 일본 정부는 그간의 부진한 FTA 진도를 만회하며 동남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등 여러 현안을 동시에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로서 TPP에 주목하게 됨.

- 2010년 11월 일본각의에서 통과된 「포괄적 경제연계에 대한 기본방침」에서 “신흥국 부상, 일본경제력의 추세적 저하, DDA 전망 불투명, 주요국간 FTA 확대 등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지체되고 있어 성장기반 재구축 필요성이 절박하게 제기된다.”라고 밝히고 있음. 여기서 ‘신흥국’은 중국을 의미하며, ‘주요국간 FTA 확대’는 한국을 지칭함. 결국 일본의 중국 견제심리에 한국의 약진에 따른 조바심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해관계와도 부합되어 미국의 동아시아 개입전략에 일본이 편승하는 양상으로 전개됨.

- 그러나, 2017년 1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TPP로부터 미국을 탈퇴시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이전 대통령들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이유 때문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양자 협정이 다자 협정보다 미국에 더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 하에 이 지역에서 양자 FTA를 더 추진하고자 함.

- 중국은 미국의 TPP 참여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회복 시도이자 중국 봉쇄책으로 인식했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추진해 왔음. RCEP 참여국들은 세계 인구의 46%, 세계 GDP의 24%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임.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 결정은 아태 지역에서 중국이 RCEP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열어주는 셈.

-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이 다시 참여할 것을 염두에 두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TPP를 추진하여 2018년 말에 발효시켰음. 일본이 미국이 빠진 TPP 성사에 주도적으로 나선 것은 환태평양 지역 통상에서 선두주자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확인시켜 줌. 최근 트럼프 정부는 대중국 봉쇄전략을 명확히 한 후, TPP 재가입을 거론하기 시작함.

- 한국은 TPP에 불참하고 있으며, 이유는 다음과 같음. ① TPP 참여는 실질적인 한·일 FTA의 체결이며, 한국이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일본산 수입품의 증가로 대일 무역수지가 악화하고 제조업 등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음. ② 한국은 FTA 선진국으로서 TPP 발효국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와 개별 FTA가 발효돼 있기 때문에 TPP 가입에 의한 추가 실익은 그리 크지 않음. ③ 한국은 TPP의 사전 참가국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협상 단계부터 참여한 사전 참가국들에 유리하게 규정돼 있으며, 특히 주도적 역할을 한 일본에 유리하게 협정이 체결돼 있음. ④ 일본과 미국의 TPP 협상결과에 따라 한국의 TPP 참여 실익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참여 여부를 주시하고 있었음.

(2)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은 처음에는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을 발표했을 때 여기에 동참하려는 의도는 적었음. 당

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정책은 중국과 대립하기보다는 가능한 긴장을 감소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우발사고나 오산으로 인한 잠재적 무력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위험감소(hedging)’ 전략이었음.

- 새로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TPP에서 탈퇴함으로써 한동안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7년 11월 아시아 순방 때 트럼프 대통령은 동남아에서 한 연설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발표하고,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아베 총리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의 추진에 합의함.

-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서 미국은 세계전략 목표가 ‘힘을 통해 국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전략적 경쟁국 또는 수정주의 국가로 규정한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이라고 선언함. 이를 위한 지역전략으로 6개 지역전략 중 첫 번째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언급함. 중국에 대해서 미국은 필요하다면 규칙에 따라서 ‘반드시 충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음.

- 2018년 10월 펜스 부통령의 연설에서도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억압적 질서에 대항하여 자유주의 질서를 수호하는 공간 즉, 상호 공존할 수 없는 강렬한 가치관 대립의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제전략문제연구소(ISS)가 2018년 5월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한 아시아안보 회의에서 미국의 새너헌 국방장관 대행과 중국의 웨이펑허 국방장관은 향후 양국이 추구할 지역 전략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음.

- 그러나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은 완성된 개념이 아니며 모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틀이 짜일지도 의문이라는 평가가 있음. 현실성도 의심을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대일로’ 등 중국의 팽창적 대외 경제정책에 대응할 경제부문의 큰 틀이 없고, 종합적인 인프라 투자계획도 없다는 점 때문임.

- 2018년 11월 펜스 미국 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통하여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일본과 함께 6백억 달러의 공적기금을 마련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민간 주도의 역내 인프라 개발사업을 촉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음. 그러나 6백억 달러 규모의 정부 기금은 1조 달러 규모의 중국 일대일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소액이며,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는 민간 중심의 인프라 구축 사업도 단기에 효과를 내기 어려운 중장기적 과제여서 이미 선점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함.

- 한편, 인도-태평양 구상의 핵심에는 인도가 있으나, 인도가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부정적임. 전통적으로 유럽, 아프리카와 교류하며 역내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여 온 인도로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의 서쪽 기둥에 머물 이유가 없으며, 인도가 미국이나 일본처럼 중국 봉쇄를 자신의 핵심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도 적음.

- 일본 역시 중국과 적대관계가 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며,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및 호르

무즈해협 파병 등의 요구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음.

(3) 중국의 대응

- 2013년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아시아를 비롯하여 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을 연결하는 통상, 투자, 사회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함. 이에 따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였으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국 중심의 국제규범의 틀을 마련하는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함.

- 중국은 자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 왔음. 이미 2007년 이러한 구상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부터 현재까지도 아시아에서 중국과 같은 특정 국가를 견제 및 봉쇄하기 위한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구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히 비판해 왔음.

- 다만 중국은 과연 이러한 구상이 실제로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다소의 의문을 품으며 최근까지는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관망하는 입장이었음. 어차피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동맹국이라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으나 이 구상의 핵심으로 간주되는 인도의 본격적인 참여 여부가 확실치 않았기 때문임. 그러나 인도가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2017년 6월 워싱턴에서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하고, 2017년 11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구상이 발표되자 중국은 본격대응하기 시작함.

- 2018년 5월 상그릴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중국의 웨이 장관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보호주의 흐름을 반대하고, 미국이 국제조약과 기구에서 탈퇴하고 자국 이익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함. 또한 중국은 타국을 침략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적 발전을 추구하며, 패권을 추구하거나 영향권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중국의 군사전략은 적극방어 전략이며 모든 군사력은 방어 중심이라고 주장함.

- 중국은 무역분쟁에서는 대화와 경쟁 모두에 준비되어 있으며, 대만문제에서는 분리를 조장하는 미국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중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함. 실용적인 부분에서는 협력하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지키면서 미국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임.

- 한편, 최근 격화되고 있는 무역분쟁에서, 미국은 작년 6월 1일부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물품에 25%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음. 중국 역시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였음. 잠시 휴전했던 관세분쟁이 최근 다시 불붙기 시작하여 미국과 중국이 추가 보복관세를 장담하고 있으며, 전선이 더욱 확장되어 환율전쟁으로 번지는 양상임. 에너지분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는 통상분쟁 수준이지만 정치적 군사적 대립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임.

3. 구조 2 : 한·일 역사분쟁

○ 아베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 장기전이 될 것인가?

- 인도-태평양에서 일본은 다자주의적 외교협상에서 주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의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러한 일본의 리더십을 도덕적으로 갉아먹는 치명적인 약점이 한·일 과거사임. 일본은 자신들이 자유무역의 수호자이며 중국에 대항하는 ‘자유롭고 열린’ 아시아공동체의 가치를 주장하는 나라라고 이미지를 만들어왔지만, 징용공, 위안부 등 반인륜적 인권 침해자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음. 일본은 정상국가를 꿈꾸며 평화헌법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 애써 왔지만, 그들이 과거에 끔찍한 전범국이었고 더구나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음. 결국 한·일 과거사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재도약 문제와 직결돼 있는 셈임.

- 역사전쟁이라고도 일컫는 현재의 한·일 갈등의 근저에는 한·일협정이 자리 잡고 있어서 65년 체제라고 불리기도 함. 65년 한·일협정은 전후 동아시아의 냉전질서의 기초를 놓은 샌프란시스코 협정체제를 강요한 미국, 2차 대전의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 민주적 정통성이 부족한 남한의 군사정권이 결탁하여 체결하였음. 당시 미국은 냉전에 대처하기 위해 일본을 핵심파트너로 삼고 하위파트너로 한국을 참여시키려 했으며, 이를 위해 한·일관계를 봉합시키기는 것이 중요했음. 이에 따라 식민지 지배 시절의 과거사가 말끔히 정리되지 못한 형태로 1965년 한·일협정을 한국에게 강요했음.

- 그러나 2018년 대법원 판결로 한·일협정체제가 거부되기 시작함. 이 협정은 박정희 독재정부가 계엄령을 내리는 등 국민적 저항을 군사력으로 진압한 가운데 체결되었으나,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국가적 강압은 힘을 잃었음. 이제 한·일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한국의 국내적인 지지 기반은 거의 없으며, 대법원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를 의미함.

- 한국 대법원 판결 집행을 위한 일본 전범기업 자산 압류, 매각, 현금화로 한국에서 징용 피해자 배상 집행에 대한 법적 선례가 만들어지면 사실상 불가역적 상황으로 넘어감. 일제의 불법적 강점으로 피해를 본 20만명 이상의 주소송이 이어지고 법적 선례대로 강제 집행이 처리되면 일본 정부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짐.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도 이것이 기준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됨. 아베 정부는 이런 전개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경제도발을 통해 한국에 경고한 것이며, 이것이 한·일 갈등의 1차적 양상임.

- 일본은 2차 대전의 주역이었던 역사가 있으며 현재도 인도-태평양전략을 구사하는 등 강대국 외교를 하는 나라이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일본을 폄하한다는 평이 있음. 일본이 보기에 한국은 과거사를 빌미로 자신의 리더십을 허무는 존재이며, 합의를 깨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일본을 모욕하고, 이유 없이 도발하는 존재임. 김대중 정부 이래로 한·일관계에서 일본은 과거사 사죄도 해 보는 등 나름 노력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독도 방문, 박근혜 정부 초기의 일본 무시, 대법원의 징용공 판결 등 ‘한국과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일본 정치인들에

게 있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상을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보다는 좋지만, 자기편은 아닌 중간 정도로 격하시킨다는 의미임.

- 전후 체제 탈각을 내세운 아베의 역사수정주의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기도 함. 최근 일본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공세는, 경제침략이라기 보다는 역사전쟁이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우익은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통치고 넘어가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로 돌아가자고 함. 아베 정권은 전후 부흥의 토대가 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불평등한 65년 체제를 토대로 2차 대전 이전의 일본 제국주의의 영광을 재현하려 시도하고 있음.

-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이고 있어서 한·일협정체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함. 남한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계엄령을 통해서 한·일협정을 강요하던 때가 아니며, 위안부 문제를 서둘러 합의한 박근혜는 탄핵을 당했음. 경제여건도 미국의 강요로 성립된 일본경제의 하위구조를 벗어났으며, 문재인 정부는 총선전략 등 국내 정치적 이유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 따라서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로 조성된 역사분쟁은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제 분업체계에 따라 얽히고설킨 자본의 이해관계를 언제까지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경제적 갈등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볼 여지도 많음.

○ 미국이 한·일 간 중재를 못하는 이유

- 한·일 갈등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수출규제로까지 번지는 등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국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중재 역할을 기대하기도 함. 그러나 1965년 체제의 성립에 미국이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음. 당시 미국은 역내 냉전을 관리할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구축했고, 한·일관계를 봉합시키기 위해 1965년 한·일협정을 한국에게 강요했음. 미국의 입장에서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흔들으로써 현재 상황을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남한이며, 65년 한·일협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결국 한국이 미국의 원죄를 추궁하는 것과 같으므로 내심 불쾌한 상황임.

- 현재 시점에서도 미국의 대중국 봉쇄를 위해서는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말아야 하는데, 미국이 보기에 65년 체제의 현상변경을 시도하며 한·미·일 삼각동맹을 흔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임. 따라서 자신들이 강요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잘 따르고 있고, 한국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대하여 미국이 중재에 나설 상황은 아님.

- 또한, 트럼프 정부로서는 일본에 내밀 청구서가 많음. 아베를 위하여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일 무역협정 협상을 연기하였으므로 그 댓가를 요구할 것이며, 그밖에도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위비 분담액 증액 등 중대한 요구사항이 많은 상황임.

4. 좌고우면하는 문재인 정부

- 광복 74주년을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격변하고 있고, 세계질서도 요동을 치고 있음.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할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확고한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정략에 휘둘리는 것 같아 우려가 됨.

- 아베정권의 수출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경제침략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민족주의적 흥분과 위기감을 부추김으로써 국내의 정치지형을 민주당 정권에 유리하게 조성하려 시도하고 있음. 또한 대기업을 비롯한 자본세력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일본에 대항한다는 빌미로 온갖 민원을 제출하고, 정부는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역대 정권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일제의 징용공 문제가 비판받는 것은 ILO협정에 위배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데, 일제 징용공문제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한다면서 그 대책으로 ILO협정 비준에 역행하고 노동탄압을 하고 있음. 이는 문재인 정부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사례임.

-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을 빌미로 한·일 갈등의 와중에도 대한민국을 상대로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미사일의 한국 배치, 방위비 분담액의 과도한 증액 등 무리한 요구를 제출하고 있음.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9·19군사합의 위반이므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이 미국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이 모두가 평화를 위협하고 신냉전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만 거듭할 뿐임.

- 일본의 경제 보복 조처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단호하게 저항할 듯한 모양새를 보여주며, “일본에 두 번 지지 않겠다”고 선포함. 정부·여당은 이순신을 들먹이고, 명량해전 12척, 항일 의병등 과거 역사를 들먹이며 일본에 단호히 맞서는 모습을 취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민주당 정권은 일본 과거사 문제에서 일관되게 일본에 항의하지 않고 결국 타협을 모색했음. 문재인 정부 역시 과거사 문제에서 일관성이 없음. 위안부문제에 있어서 화해·치유 재단은 해산했지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함.

- 대법원 판결로 대두된 징용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6월에 일본정부에 제시한 방안도 불철저함. 위자료 지급의 주체가 신일주철이 아닌 한·일 기업들이며, 이들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타협안(‘1+1’안)임. 정부가 위자료 지급의 당사자가 아니란 점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모양새이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이마저도 양보해서 일본이 협상에 응한다면 ‘1+1’안에서 더 후퇴할 수 있음을 내비침. 실제로 7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밝힘.

-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되돌릴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을 실행하면 돌이킬 수 없음.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집행 자체는 65년 체제 변경의 본질이 아닐 수 있지만, 아베 정부로서는 중대국면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그동안 경고한대로 전면전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있음.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선 보상, 일본 정부의 후 지급 등 다양한 타협책을 모색할 여지가 큼.

- 한국은 동맹으로서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일관되게 지지하고 협조해 왔으며, 문재인 정부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봉쇄에 협조하였음.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 등에서 보듯이 다를 바 없으며,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음.

- 지소미아(GSOMIA) 파기는 의외의 강수이지만, 이낙연 총리가 “종료까지 3개월 남았으며, 일본이 부당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할수 있다” 라고 밝히고 있어서 양보를 생각하고 있음. 또한 지소미아 파기는 총선전략 혹은 조국 청문회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전술의 일환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중거리미사일 배치, 방위비 분담 등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대해 양보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수도 있음.

5. 노동당의 대응

- 2차 대전 이후의 일극체제가 붕괴된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음. 이제 미국은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각국에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보듯이 각 국에 대해 스스로 지키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동맹에게도 경제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음. 미국이 강해서가 아니라 약해지고 있기 때문임. 미국의 대중국 봉쇄는 2차 대전 이후의 질서가 재편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며, 우리는 지금 급격한 세력변경의 시대를 경과하고 있음. 따라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 입장과 원칙이 필요함.

-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속에서 현재 동북아에서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미국의 패권전략이며, 이를 이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는 일본의 극우 정치세력임. 한편 이에 협조해 온 한국 정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음. 반일민족주의를 부추겨서 한·일 갈등을 조장하고, 경제전쟁 운운하며 자본의 이익에 협조하는 한편 노동계급의 이익을 잠식하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기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전략에 대하여도 평화의 관점과 민주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거부하지 못하고,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 증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의 의제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음.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의 눈 밖에 나는 일은 극도로 몸을 사리는 한편, 한·미 간 전쟁연습은 진행하는 등 북미관계의 틀에 종속시킴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일본 우익의 수정주의 역사관과 제국주의적 야망으로 보건대, 일본과의 역사분쟁도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일본기업에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2012년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일 레이더 조사(照射) 및 초계기 갈등,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왕 사죄 발언, 세계무역기구(WTO)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한국 승소, 일본의 징용 문제를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와 한국의 불응, 한국의 양국 기업 공동기금에 의한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제안과 일본의 거부 등등... 양국 간 불화가 거듭되고 있으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음.

- 격랑의 시대임.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신냉전전략을 거부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여 동북아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일본과는 65년 한·일협정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설정을 하여야 할 때임. 대내적으로는 동북아 역사지형의 변화를 추동한 근본동력인 민주주의를 더욱 촉진시켜야 하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불평등을 해소할 해결책을 찾아야 함.

-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한 74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민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열정이며, 냉정하고 합리적인 시대감각임. 정치권이 조장하고 있는 민족주의 열풍에 휩쓸리지 않고, 열강의 패권주의 경쟁에 매몰되지 않으며, 계급적 입장 및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해야 할 때임.

2019년 하반기 계급운동 진영의 공동실천 제안

김승만 현장실천·사회변혁 노동자 전선

1. 정세

1) 경제 정세

- IMF는 지난 7월 2019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으나 실제 경제성장률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됨.
- 미국 트럼프 정권 등장 이후 미·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가 등장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함.
- 세계 주요국인 미국의 경우 2%대, 중국 6%, 일본 0.5%대를 예상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침체의 길로 나가고 있음.
- 한국은행은 지난 7월 18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5%대에서 2.2%대의 전망치 수정으로 한국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실질적으로 지난 1/4분기 -0.4%, 2/4분기 1.1%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2019년 경제성장률이 1.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무역지수 악화, 수출물량 감소, 산업 생산 및 설비투자 동반 감소, 미국 중심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중 무역 및 통화 갈등으로 전체 수출량 중 27%를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가 호전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전망됨.
- 특히, 현재 진행되는 한·일간 수출규제 및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결정은 한국의 경제위기 상황을 더욱 더 교란시키는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임.
- 종합적으로 세계 경제는 미국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 정책과 미·중 경제전쟁 등의 이유로 2~3%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되는 등 경제침체가 예상되며, 한국 경제는 이러한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 등으로 인해 지난 2008년 이후 10년이 넘게 1~2%대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등 장기적 경제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임.

2) 한국 자본 동향

- 6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가 259,000명 정도로 증가했으나 증가한 일자리가 대부분 초단기와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가로 확인되면서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됨. 실질적으로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38만 명 정도가 감소했고, 제조업 또한 7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고용지표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작금의 한국 경제의 위기가 일련의 정책적 오류로부터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경제위기라는 점에서 그 해결 방안이 요원한 상태임.
- ‘소득주도성장론’ 조차 한국 자본주의 경제위기의 근원적 해결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상된 일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고용정책은 취임 초기 제기한 ‘소득주도성장론’의 폐기에 이어 단기적 고용지표 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권의 단기적 고용지표 관리 정책은 자본의 규제완화에 집중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2018년 통과된 ‘지역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에 이어 금융·정보산업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을 통해 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자본규제 움직임은 문재인 정권의 단기적 고용 지표 관리 정책의 본질이 노동자 계급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 또한 자동차 산업에서 ‘광주 형 일자리’에 이어 전국화 추진 및 조선 산업에서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의 통합, 삼성의 불법적 경영승계를 위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위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등 독점자본 중심으로 한 자본질서 재편과 현대와 삼성 중심으로 한 독점자본 중심의 법·제도 개편으로 표현되면서 작금의 한국 자본주의 위기를 ① 자본의 규제 완화, ② 독점자본 중심의 자본 질서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음.

3) 문재인 정권의 노동정책

- 집권 초기부터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노동조합 운동을 포섭하여 사회적 합의주의(경사노위)를 실현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거부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경사노위)는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 그러나 지난 상반기 ILO 핵심 협약 합의 등 의 과정을 보면 민주노총을 지속적으로 경사노위에 참여를 포섭하거나 최소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라도 뇌사상태에 빠져있는 경사노위를 부활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선 입법 · 후 비준 방식으로 추진했던 ILO 핵심 협약이 지난 5월 경사노위에서 불발 되면서 문재인 정권은 국회에서의 ILO 핵심 협약안 비준을 사용자 대항권 등 노동법 개악과 함께 동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이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의 요구인 공무원 단결권 등 노동계의 요구는 전면 배제된 상황임.
- 한편,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87%로 최저임금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최저임금 1만원’공약은 실질적으로 폐기되었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및 차등 적용과 주휴 수당 폐지 등을 통해 임금 삭감을 노골화 하고 있는 상황임.
- 그리고 최저임금 삭감과 함께 탄력근로제를 최소 6개월로 확대하는 근기법 개악과 최근 한·일 간 무역 전쟁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해당 업종에 대한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 허용’과 ‘과감한 규제 완화’, ‘국고 지원’등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예정되고 있는 상황임.
- 문재인 정권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민간자본 영역는 커녕 그나마 공공부문에서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또한 시기마다 정규직 전환 대상 수가 줄더니 이 조차 대 부분 자회사 상용직 고용 방식으로 일단락되면서 비정규직 관련한 문재인 정권의 태도는 비정규 확산 및 강화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더불어 비정규직의 대표적 형태라 할 수 있는 특수·간접고용 문제는 여기 저기 떠넘기면서 그 대로 방치 아니 확대를 조장하고 있는 상황임. 전체 취업자 중 8%에 해당하는 230만 명의 특수·간접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통계청)은 그나마 노동 관련 법 조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실질적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임. 특히 최근 신 성장 산업 확대 정책에 의해 더욱 더 확대되는 특수·간접 고용 형태는 한국 자본주의 장기적·일상적 경제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결과임.

4)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가 미·중 무역 분쟁으로 급기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자본주의 보호무역주의 및 무역 전쟁은 자국의 경제위기가 그대로 형상화 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임.
- 한국 또한 지난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자체가 2%대에 못 미치는 경제침체 상황이 1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위기가 무역보호주의 또는 무역전쟁 등으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결론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한국의 행보는 기본적으로 자국 내 경제위기의 표현 형태이며 ‘평화’를 내세운 경제위기 극복방안의 과정에서의 각 국가간 쟁투의 모습임..
- 조·미를 중심으로 한 정상회담 공세는 고전적인 의미의 ‘한·미·일 <-> 조·중·러’ 역학관계를 조선을 중심으로 미국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으며, 한국은 중재자의 역할을 표방하나 그 역할이 미비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러시아의 경우 동북아의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임.
-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권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제재를 빌미로 광범위한 ‘국가주의’를 동원하여 전 국민적 반일·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 불매 애국운동을 기치로 오는 2020년 4월 총선까지 이어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더구나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공세와 애국주의를 동원하는 일본 불매운동의 과정에서 한국 자본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노동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자본의 집적 과정에 대한 재정비 및 그간 투쟁의 과정에서 획득해 왔던 각종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 자유 한국당의 경우 동북아 지형에서의 미국지지 행위가 조·미를 중심으로 한 변화되는 정세와 일본지지 행위가 일본 불매운동과 맞물려 어긋나면서 실질적으로 정치판에서 민주당 중심의 문재인 정권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임.

5) 노동자 대중 조직 운동의 상태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한국 계급운동은 2019년 상반기 계급투쟁을 주도했다 기 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점자본 중심의 자본질서 재편, 자본규제철폐,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한 노동법 개악, 임금삭감 및 비정규 확대, 민주노총 중심으로 한 사회적 합의주의 공세 등’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기에 급급했다. 아니 보다 노골적으로 평가하자면 뒤 따라 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음.
-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이 수세적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 이유는 전국 각지에서 목숨을 걸고 전개되는 노동자 현장투쟁을 하나로 모아내어 전국적 계급적 투쟁 전선으로 확대하는 투쟁 조직화가 부재했기 때문임.
- 현재 민주노총은 2019년 하반기 투쟁을 우선적으로 ① 2020년 4·13 총선에 노동자 민중을 포함한 진보 역량을 총 집결 시키기 위해, ② 2017년 촛불 혁명을 미완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이를 완수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하고 있음.
- 민주노총은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투쟁력 등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비정규 철폐, 재벌체제 개혁, 반전평화 자주 통일 운동의 정착’ 등의 과제로 결집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임.

-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019년 하반기 구체적 투쟁의 상으로 (9/23 민주노총 임시 대대) - (10/중~하순 총파업 찬반투표) - (10/말~11/초 총파업·총력투쟁) - (11/9 전국 노동자 대회) - (11월 말/12월 초 사회적 총파업)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임.
- 전반적으로 민주노총의 2019년 하반기 투쟁은 투쟁을 하겠다는 점에서 긍정적 의의가 있으나, 현재 전개되는 자동차 산업과 조선 산업, 그리고 비정규 및 공무원(일반·교육) 노동자 중심 등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투쟁 대오에 대한 조직화와 투쟁 주체에 대한 배치 등에 대한 고민 부재가 평가되어야 함.

2. 2019년 하반기 노동자 계급 운동 진영의 공동실천

1) 공동 실천의 기초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대중조직의 2019년 하반기 총 파업 투쟁이 위력적으로 수행되기 위한 조직화 사업을 진행한다.2. 이를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투쟁하는 투쟁 대오를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투쟁의 주체 형성에 집중한다. |
|-----------------------------------------------------------------------------------------------------------------------------------------------------------------------------------------------------|

2) 구체적 사업 계획

① 전국 투쟁 사업장 투쟁 주체 구축 사업

㉠ 전국 해고자 투쟁 토론회 개최

- 기초 :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고자 투쟁을 하나로 모아내기 위한 방안으로 시급하게 '해고자 투쟁의 전국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토론회 결과 전국 각지에서 전개되는 해고자 투쟁을 하나로 모아 낼 수 있는 조직적 방안을 마련한다.
- 일시 : 2019년 월 일
- 주최 : 노동자 계급 운동 진영
- 대상 : 해고자 투쟁 주체
- 내용 : 해고자 투쟁의 전국화 방안

㉡ 전국 투쟁 사업장단 회의

- 기초 : 2019년 하반기 민주노총 투쟁을 투쟁하는 단위들이 조직하고 엄호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를 회의를 통해 구축한다.
- 일시 : 2019년 10/중~하순
- 주최 : 노동자 계급운동 진영
- 대상 : 전국 투쟁 주체
- 내용 : 2019년 하반기 투쟁의 주체 형성에 대해

㉔ 2019년 전국 노동자 대회 사전 대회

- 기초 : 전국 해고자 투쟁 토론회 및 전국 투쟁 사업장단 회의를 통해 구축된 투쟁 대오를 중심으로 2019년 전국 노동자 대회 전야제(사전대회)를 힘있게 개최하고 2019년 하반기 투쟁의 결의를 모아낸다.
- 일시 : 2019년 11월 8일 전야제 또는 11월 9일 사전대회
- 주최 : 사전대회 조직 위원회
- 대상 : 투쟁 대오
- 내용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 결의

㉕ 총파업 결의대회

- 기초 : 2019년 하반기 투쟁을 힘있게 사수하고 전개하겠다는 결의를 모아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 일시 : 2019년 11/말~12/초
- 주최 : 결의대회 조직위원회(또는) 노동자 계급운동 진영)
- 장소 : 서울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장소
- 내용 : 투쟁 주제 00대 요구안 선포